

수시연구 2013-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2013. 12.

박상우·이승우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박 상 우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 연구진

– 이 승 우 : 제1장 일부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노 경 환(한국농어촌공사 부장)

● 이 유 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남 우 진(해양수산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김 정 봉(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머 리 말

전통적으로 어촌은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랜 역사와 함께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단순히 어업활동을 위한 어업생산기반 공간으로 인식되던 어촌은 오늘날 국민의 여가와 힐링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은 어업의 정주공간에서 도시민의 다양한 니즈(Needs)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역량에 맞춰 특화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2005년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어촌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생산기반 확충, 어촌관광 활성화 등에 한정되어 사업이 이루어져 다양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어촌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주민주도의 어촌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어촌발전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 또는 6차산업화 등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어촌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정부정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어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촌의 6차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의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박상우 부연구위원과 이승

우 연구위원이 함께 집필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을 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노경환 부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부연구위원, 해양수산부 남우진 사무관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마지막까지 감리해 준 KMI 김정봉 연구감리위원께도 이 글을 빌려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성 귀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론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7

제2장 지역정책 동향과 어촌개발 관계법령 분석	9
---------------------------	---

1. 지역정책의 동향	9
1) 국내 지역정책 동향	9
2) 국외 지역정책 동향	14
2. 어촌관련 법률 현황과 특성	17
1) 어촌관련 법률 현황	17
2) 어촌개발 관계법령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과의 관계	19
3. 시사점	25

제3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안	27
-------------------------	----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의 필요성	27
1) 어촌관련 법률과의 차별성 강화	27

2) 어촌특화발전 개념 재정립	27
3) 용어 등 조문의 정비	28
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29
1) 개요	29
2) 주요 개정내용	34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57

1. 요약 및 결론	57
2. 정책제언	59
1)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59
2) 개정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60

참고문헌 69

부록

부록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신규 대조표	71
부록 2. 개정안 관련 입법사례	101
1) 정책심의회 비교(중앙수산조정위원회vs어업·어촌정책심의회)	101
2) 어촌특화발전구역 해제를 위한 규정 입법사례	105
3) 어촌특화발전 지원(지원센터)을 위한 입법사례	109
4) 어촌특화발전 지원(재원보조)을 위한 입법사례	113
5) 어촌특화발전 지원(부담금&조세 감면)을 위한 규정 입법사례	124
6)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강화 규정 입법사례	134
7) 사업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입법사례	140

표 차례

표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조문	5
표 2-1.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13
표 2-2. 일본 어촌6차산업화 사업 지원내용	16
표 2-3. 어촌관련 법률 현황	17
표 2-4. 어촌개발의 추진방식에 따른 법령 구분	19
표 3-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개요	29
표 3-2. 제2조(정의) “어촌특화발전” 정의 신규 대조표	34
표 3-3. 6차산업화에 대한 국내외 관련법률 검토	35
표 3-4. 유사 지원 특별법의 제1조(목적) 비교	36
표 3-5. 제1조(목적) 신규대조표	37
표 3-6. 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신설 조항 신규대조표	38
표 3-7. 제1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 신설 조문 신규 대조표	40
표 3-8.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에 관한 신설 조항 신규대조표	41
표 3-9.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주체 및 절차 개정 조항 신규대조표	44
표 3-10. 어촌특화발전계획 심의기구 변경 신규대조표	45
표 3-11.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신규대조표	46
표 3-12. 어촌특화발전사업 성과평가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47
표 3-13. 어촌특화발전구역 지정해제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48
표 3-14. ‘유사 지원 특별법’ 지원내용 비교	49
표 3-15.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지원관련 규정 신규대조표	52
표 3-16. 보조 및 용자 지원에 관한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53
표 3-17.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54
표 3-18. 용어의 변경에 대한 신규대조표	54
표 3-19. 특화어촌 관련 규정에 대한 신규대조표	55
표 3-20. 어촌신용조합 관련 규정에 대한 신규대조표	56

표 4-1.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 방안	60
표 4-2.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인력 및 업무분장	63
표 4-3.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인건비 재정소요(2015~2019년)	63
표 4-4.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운영비 재정소요(2015~2019년)	64
표 4-5.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임차비·신축비 재정소요(2015~2019년)	65
표 4-6.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치·운영비(2015~2019년)	66
표 4-7. 어촌특화발전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2015~2019년)	66
표 4-8. 어촌특화발전사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5~2019년)	67
표 4-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5~2019년)	6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8
그림 2-1. 지역정책 흐름의 변화	10
그림 2-2. 지역정책의 수요변화	10
그림 2-3. 최근 지역정책의 방향	11
그림 2-4.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방식	12
그림 2-5. OECD 국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	15
그림 2-6. 일본의 어촌 6차산업화 개념도	16
그림 2-7. 어촌관련 법령의 현황	18
그림 2-8. 어촌개발의 개발방식 개념도	20
그림 2-9. 어촌의 공간적 개발단위	21
그림 2-10. 어촌관련 법률의 사업영역별 분류	22
그림 2-11. 어촌관련 법률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관계도	24
그림 3-1. 어촌특화사업 추진 개념도(현행)	31
그림 3-2. 어촌특화발전사업 추진 개념도(개정안)	32
그림 3-3. 경북 붉은대게를 활용한 어촌특화발전사업 개념도(예시안)	33
그림 3-4.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어촌특화발전사업 개념도(예시안)	33
그림 3-5.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이원화(시행자 vs 사업자)	38
그림 3-6. 어촌특화발전사업자 대상	39
그림 3-7.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절차 개정 전·후 비교	43
그림 3-8.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개념도	51
그림 4-1. 어촌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일정	61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1. Purpose

- The study suggested need for revising *the Special Act on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before its enactment along with detailed revisions. By doing so, it aimed to help implement governmental tasks.
- The study redefined concept of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and revised provisions on purpose, definition, project entities, supportive measures, management/supervision, evaluation and reflux of capital, which are necessary to identify fishing villages as the 6th industry. The revision will build the groundwork to sharpen competitiveness of fishing villages.
- As supportive measures for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Projects,' the study introduced new strategies, such as establishment/opening of the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Support Center, aides/loans or tax/allotment reduction.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 The study analyzed relevant literature, laws and regulation, while holding policy councils with ministries and expert meetings for partial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2) Feature

- Since the study suggested revising the law, it held policy councils to tune up de-

tails and supplemented the contents based on constant consulting with legal experts.

3. Results

1) Summary

- The study established new concept of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concept limited to redevelopment, landscape management and city-fishing village exchanges led by villagers, the study expanded the concept to include ‘the 6th industry.’ By doing so, the study paved the ground for new policies which would strengthen local edge by creating new income sources and jobs.
- The study improved procedures to implement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development.
 - It indentified project entities, changed consultation organizations, introduced provisions for strong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repared ground for differential support based on project evaluation and prepared provisions for cancellation of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 The study newly set up supports for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 The current law does not include practically supportive measures. The study prepared indirect and direct assistance, such as establishment/operation of the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Support Center, aid, loan and reduction of tax or allotment.

2) Policy contribution

- With its partly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Fishing Village Specialized Development*, the study prepared practical support for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s well as helped the government to implement national tasks.

3) Expected benefits

- The study prepared legal foundation in changing fishing villages into the 6th industry.
 - It built the groundwork for creativ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by preparing legal foundation for its development as the future industry and the 6th industry.
- The study would help to create new income sources and jobs.
 -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s the 6th industry would boost new income sources and jobs, vitalizing local econom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 어업생산기반을 확충, 어업외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개발방식 정책들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사업이 배분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업방식은 지자체와 어촌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사업추진 이후에도 사업주체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 정책의 실패는 국내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된 결과 그 효과가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전통적인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 지역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되어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는 2012년 5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은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으로 개발이 가능해져 어촌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은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마련’ 불투명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제외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촌특화발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경관법」 등 다른 농어촌 지역개발 관계법령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되면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최근 지역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 균형발전 중심에서 민간주도의 상향식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정주환경이나 소득 등 부문별 접근에서 삶의 질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0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촌분야에서도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원발의, 2013.10.30.)」을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창의적 어촌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촌어항법」등 기존 법령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촌자원을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과 논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재정 필요성과 주민주도의 마을정비로 한정된 ‘어촌특화’의 개념을 어촌 6차산업화까지 확대된 ‘어촌특화발전’으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되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시행일자 2013.5.24)」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련 입법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¹⁾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어촌특화’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어촌특화발전’으로 재정립하고, 어촌 6차산업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시키는데 필요한 i)목적, ii)정의, iii)사업주체, iv)지원, v)관리·감독, vi)평가·환류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어촌의 지역특성화와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제2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제22조(보조 및 융자),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창의적 어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어촌 6차산업화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두 15개 조문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제32조(어촌신용조합)은 일부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다.

1)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촌 주민 주도 지역개발

먼저, 기존 조문을 수정한 것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어촌특화발전 지향 원칙), 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16(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로 7개 조문에 해당된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은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해제), 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제32조(보조 및 용자), 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성과평가 등)로 8개 조문에 해당된다.

| 표 1-1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조문

구분	현행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어촌특화발전 지향 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계획과의 관계)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제10조(국토법 특례) -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 - 제7조(주민제안 등) -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 제10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 제11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제12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해제) - 제13조(국토법 특례) - 제1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위)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지정·결정의 의제) -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제18조(행위제한 등) - 제19조(환지 등) - 제20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 제21조(준공검사) -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 제1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위) -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9조(지정·결정의 의제) - 제20조(인허가등의 의제) - 제21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제22조(행위제한 등) - 제23조(환지 등) - 제24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 제25조(준공검사) -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 제27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28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 제2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제30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4장 특화어촌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 제28조(주민제안 등) - 제29조(생태·환경의 보전) - 제30조(지역 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 제32조(보조 및 융자) - 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34조(생태·환경의 보전) - 제35조(지역 간 교류)
제5장 재정·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조(자기부담 등) - 제32조(어촌신용조합)<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자기부담 등)
제6장 보칙 및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연계지원) - 제34조(사업의 위탁) - 제35조(채권발행) - 제36조(조례의 제정) - 제37조(벌칙) - 제38조(과징금) - 제39조(이행강제금) - 제40조(공청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조(연계지원) - 제38조(사업의 위탁) - 제39조(채권발행) - 제40조(조례의 제정) - 제41조(벌칙) - 제42조(과징금) - 제43조(이행강제금) - 제44조(공청회 등) -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 제4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성과평가 등)

주 : 음영처리된 조문은 신설된 규정이며, 볼드처리된 조문은 수정된 규정임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어촌지역이 직면한 FTA 등 시장 개방압력과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등 대내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어촌의 6차산업화 지원 방안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각 장과 부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방법, 연구체계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지역정책 동향과 어촌개발 관계법령 분석에 관해 다루었다. 국내외 지역정책의 최근동향은 균형발전 보다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6차산업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촌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들 법률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안을 다루었다. 앞서 검토하였던 제2장의 시사점을 토대로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신구대조표,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사례를 첨부하여 향후 소관위, 법사위 등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어촌관련 법령분석, 중앙부처 정책협의회 4회,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2회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관련 문헌조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검토되었던 공청회 자료, 의안원문, 소관위 심사·검토보고서, 법사위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등과 보고서와 「농어촌정비법」 개정방안 연구 등 유사 법령의 개정방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어촌관련 법령분석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어촌어항법」, 「농어촌정비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경관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는 일부개정(안) 마련 시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정방향,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 개정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율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 6차산업화 개념으로 확대시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실무역할을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내용을 보완하였다.

(2) 연구 추진체계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개정

(안)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제기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 어촌관련 법령분석, 국내외 지역정책 동향분석을 통해 개정방향을 설정하였다.

해양수산부 정책협의 등을 통해 개정방향 설정이 이루어진 후에 「어촌 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여 정부정책에 제언하는 절차로 수행하였다.



| 그림 1-1 | 연구의 수행체계

제 2 장 지역정책 동향과 어촌개발 관계법령 분석

1. 지역정책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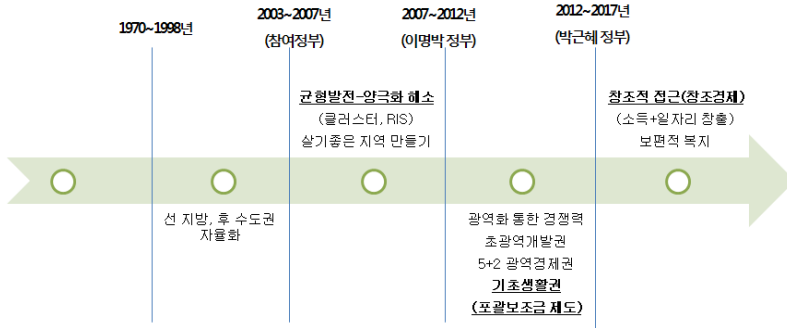
1) 국내 지역정책 동향

(1) 정부별 지역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79달러에서 2012년 22,489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눈부신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과 낮은 국민행복지수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계층 간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27에서 2012년 0.31로 증가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1970년~1990년대에 걸쳐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활력 저하로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농어촌지역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의 은퇴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미 침체된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이러한 정부주도의 균형적인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 → ‘활력저하’ → ‘인구유출’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림 2-1 | 지역정책 흐름의 변화

(2)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가. 지역정책의 수요변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善循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책에 대한 수요가 단순한 물질적인 경제성장 보다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지자체의 역량이 높아져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정책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자체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분권형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2013년.

| 그림 2-2 | 지역정책의 수요변화

나.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에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어촌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3 | 최근 지역정책의 방향

※ 자료 : www.region.go.kr/policy/vision.php

(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정비

농어촌 마을단위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나 농어촌주택개량 및 농촌마을 리모델링 등 각 부처사업들을 묶어 낙후지역 중심의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집수리나 지붕개량 등을 추진한다.

(나) 주민중심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개발을 특수상황 지역, 일반 농산어촌, 성장촉진 지역의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이들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중복투자 등 종합적 관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사업들을 지역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주민과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개편하고,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해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구 자율편성 재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창조지역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창의적 사업모델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그림 2-4 |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방식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어촌과 관련된 국정과제 중 중요한 것은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농어촌 복합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농 인적자원 매칭 시스템, 마을 간 연계를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농촌 6차산업화의 동향

농촌도 어촌과 마찬가지로 WTO-DDA, FTA 등 시장개방의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갖고 있는 영세·소규모 농업구조의 한계와 더불어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등 악순환되면서 갈수록 농촌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정부주도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사실상 실패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종전의 대형 개발사업이나 하드웨어상 업과는 달리 내

발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①지역주민이 주도로 하여, ②지역자원을 활용하여, ③지역단위에서 고용을 확보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²⁾

특히, 최근에는 농촌의 6차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 표 2-1 |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총칙 (제1장)	목적(§1) 정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5)	기본이념(§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
농촌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6) 시도 및 시군 농촌산업발전위원회(§8) 농촌산업 사업자의 인증(§9) 인증의 표시(§10) 결격사유(§12) 인증의 취소(§14)	시행계획의 수립·시행(§7) 인증의 유효기간(§11) 인증의 승계 등(§13)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3장)	농촌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15) 농촌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16) 농촌산업육성전문기관의 지정(§17) 농촌산업의 연구·개발 등(§18) 전문인력의 양성(§19) 상생협력사업의 장려(§21) 판로지원사업(§22) 공공기관 등의 구매촉진(§23) 농촌산업 공동사업 지원(§24) 금융 지원(§25)	농촌산업 창업지원(§20) 농촌산업에 관한 홍보(§26)
농촌산업지구 육성 (제4장)	농촌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27) 농촌산업지구 지정의 효과(§28) 농촌산업집적화지구의 지정 해제(§29) 농촌산업지구의 지원(§30) 농촌산업지구 지원센터의 지정·운영(§31)	
보칙 (제5장)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3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33) 보고·검사(§34) 청문(§35) 권한의 위임·위탁(§36)	
벌칙 (제6장)	벌칙(§37) 과태료(§38)	

자료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www.agri.na.go.kr

2) 김태근, 허주녕,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2

2) 국외 지역정책 동향

(1) OECD 국가의 지역정책

OECD 국가들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수단들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낙후지역의 격차를 보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소득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지역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된 결과 그 효과가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선별적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Top-down) 개발방식은 중앙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지식이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하향식 개발방식은 지역 내 투자기반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수동적인 행태로 인해 보조금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첫째,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목표가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정책의 범위에 있어서도 소득·정주환경 정비에서 삶의 질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정책추진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 그림 2-5 | OECD 국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

자료 :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p.47에서 인용, 이원섭, 2012년.

(2) 일본 6차산업화의 동향

일본의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어촌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FTA 체결에 따른 개방의 압력, 농림수산물 가격 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6차산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크게 어업관련 지원과 신사업 창출로 대별된다. 어업관련 지원은 수산물의 신규 마켓 시장 개척, 가공공장 등 수산업 공동이용시설, 어업관련 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융자, 어업경영 등에 필요한 단기 운영자금 융자가 있다. 반면, 신사업 창출과 관련된 지원은 관광객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전통요리 등을 기초로 한 신 메뉴 개발, 부당한 상표에 대한 대응,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 정보 확인, 농림수산물활동 홍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표 2-2 | 일본 어촌6차산업화 사업 지원내용

어업 관련	신사업 창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의 신규 마켓 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수산업 강화계획에 의거 지원 ·가공공장 등 수산업 공동 이용 시설 ·어업 관련 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융자 ·어업경영 등에 필요한 단기 운용자금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 ·전통 요리 등을 기초로 한 신 메뉴 개발 ·부당한 상표 대응 ·농림수산분야의 지적 재산 정보 확인 ·농림수산물활동 홍보

일본정부는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2013년 예산을 3,615백만 엔 (한화 약 4,230억 원)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이 중 6차산업화 추진 지원사업 741백만 엔, 6차산업화 경비 지원사업 702백만 엔,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추진 교부금(신규) 772백만 엔, 6차 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정비 교부금(신규)에 1,400백만 엔이었다.



| 그림 2-6 | 일본의 어촌 6차산업화 개념도

자료 : 일본 수산청(www.jfa.maff.go.jp)

2. 어촌관련 법률 현황과 특성

1) 어촌관련 법률 현황

어촌 관련 법률은 19개 법률³⁾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13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9개), 안전행정부(2개), 보건복지부(2개), 국토교통부(2개), 산업통상자원부(1개) 등이 함께 관여하고 있다.

| 표 2-3 | 어촌관련 법률 현황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0. 1.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6. 6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도로 정비법	1991.12.14	안전행정부
도서개발촉진법	1986.12.31	안전행정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80.12.31	보건복지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4. 6. 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1965.12.30	산업통상자원부
농어촌정비법	1995. 6.2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4.30	보건복지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2008. 6.2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2005.12. 1	해양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013. 5.24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9.12.10	해양수산부
경관법	2007.11.18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1. 1	국토교통부
어장관리법	2001. 1.29	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10.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02. 7.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4. 4.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3) 어촌관련 법률 19개는 연구자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며, 시각에 따라 더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표 2-3>의 어촌 관련 법률 현황을 각 개별법의 목적과 성격을 토대로 크게 정책, 개발(정비), 지원, 관리(규제)로 세분화시키면 <그림 2-6>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어촌 관련 법률은 개발(정비) 7개와 지원 부문 6개에 해당하는 법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본래 제정 시 취지나 사업내용으로 보았을 때 특정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 법률의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에 관한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되었고, 사업주체, 사업방식 등이 마을협약을 통한 마을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개발(정비)에 해당한다. 이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법의 목적과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림 2-7 | 어촌관련 법령의 현황

2) 어촌개발 관계법령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과의 관계

(1) 어촌개발의 추진방식

지금까지 어촌개발의 추진방식은 크게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과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으로 대별된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은 어촌어항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어촌관련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획일화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은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2012년 이후에 제정되는 어촌개발 법률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특화어촌위원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등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개발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나 민간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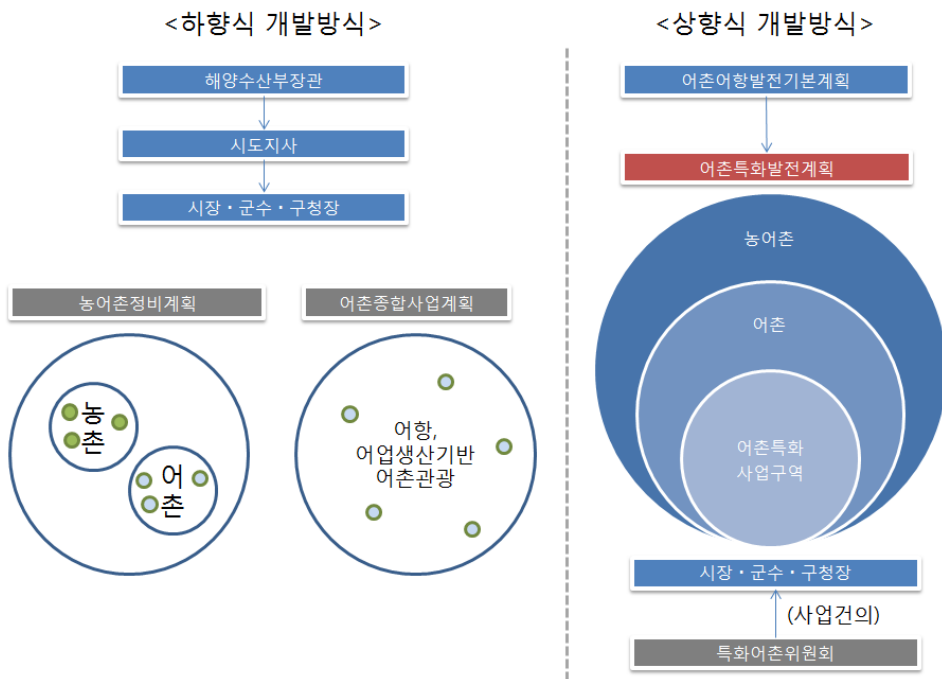
| 표 2-4 | 어촌개발의 추진방식에 따른 법령 구분

하향식(Top-down) 개발방식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서개발촉진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농어촌정비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어촌어항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 *경관법

주 : *는 사업방식을 민간주도 상향식으로 최근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하향식 개발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농어촌정비법」과 「어촌어항법」의 어촌개발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포괄보조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면 중앙정부에서는 평가·환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어촌의 마을주민 스스로 특화어촌위원회나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을 만들어 사업건의를 하고,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데 점에서 하향식 개발방식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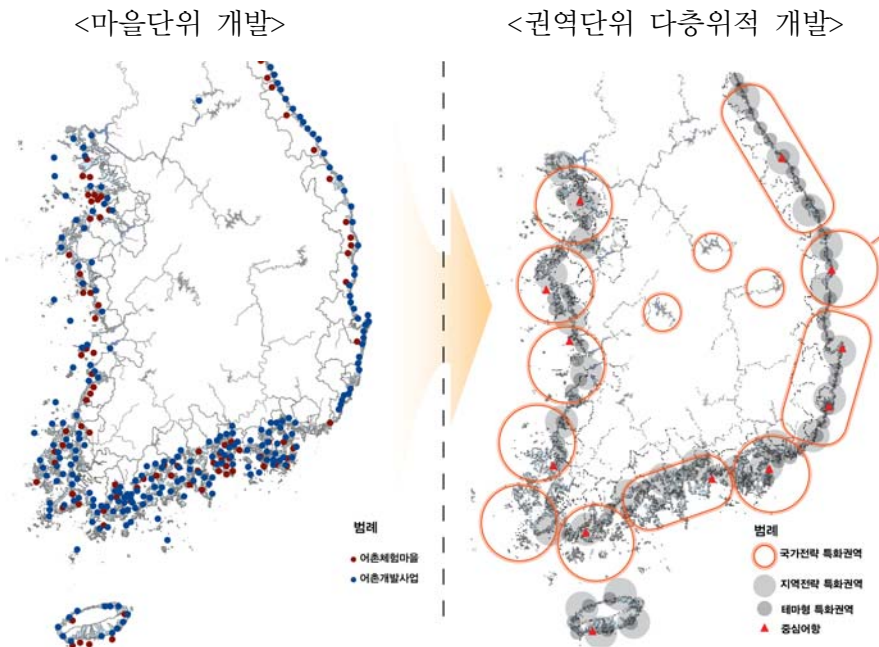


| 그림 2-8 | 어촌개발의 개발방식 개념도

(2) 어촌의 공간적 개발단위

지금까지 어촌의 공간적 개발단위는 어촌계 중심의 마을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어촌계를 사업주체로 하는 마을단위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는 어촌개발 사업이 어업생산기반, 어항개발, 어촌관광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마을어장, 어항 등 어촌의 주요한 자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어촌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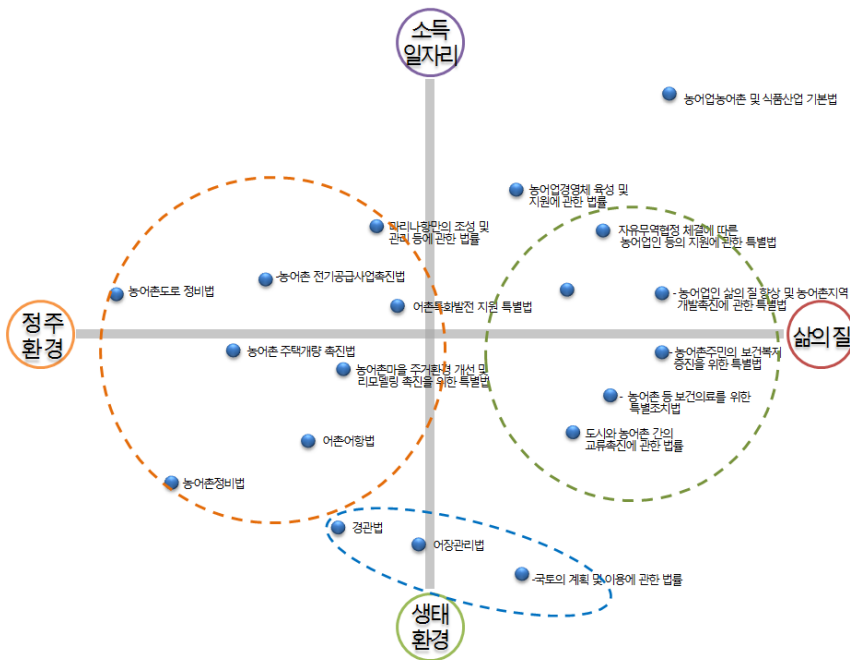
하지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원의 연계성과 마을주민(시·군 또는 시·도) 간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광역단위의 어촌개발이 가능하여 마을단위 어촌개발에서 권역단위 다층위적인 어촌개발이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그림 2-9 | 어촌의 공간적 개발단위

(3) 어촌관련 법률의 사업영역

어촌개발의 사업분야는 크게 ① 어촌의 인프라(정주환경) 개선, ②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③ 소득·일자리 창출, ④ 생태·환경 보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그림 2-10 | 어촌관련 법률의 사업영역별 분류

가. 어촌의 인프라 개선

농어촌은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정부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어촌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지붕개량, 도로정비, 어항건설,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근거법률은 농어촌정비법(1995.6.23.시행), 농어촌도로 정비법(1991.12.14. 시행),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1965.12.30. 시행), 어촌어항법(2003.1.1. 시행)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013.5.24. 시행),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4.6.5. 시행) 등이 해당된다.

나.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어촌·어업인 관련 법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생계안전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부각되는 시점에 법률 제정이 급속히 늘어났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6.6. 시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4.30. 시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8.6.22. 시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2002.7.1. 시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4.1. 시행) 등이 해당된다.

다. 소득·일자리 창출

어촌을 포함한 지역개발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어촌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0.1.1.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10.2. 시행) 등이 있다. 최근의 지역정책에서 지역문제는 결국 외부의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의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더 요구되고 있다.

라. 생태·환경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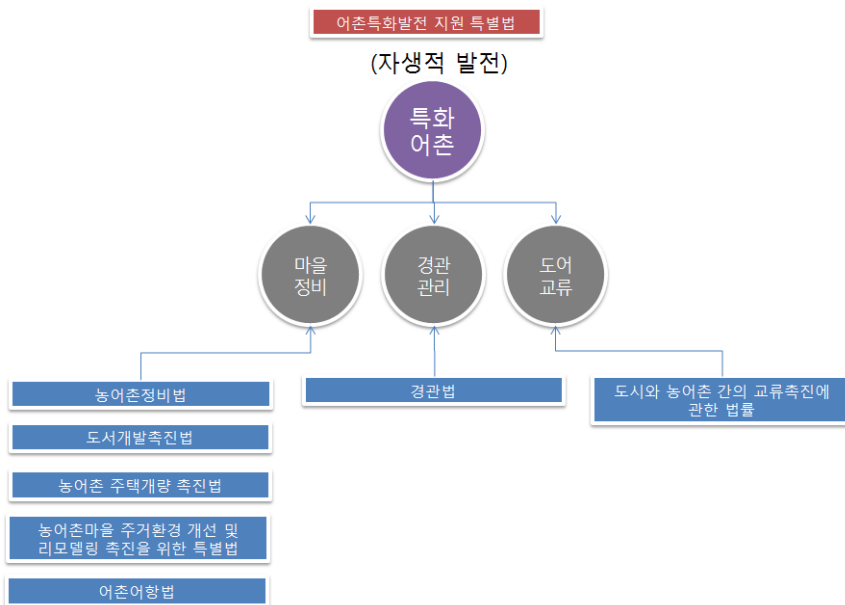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은 자연환경과 생태여건이 중요한 공간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은 경관법(2007.11.18. 시행), 어장관리법(2001.1.29. 시행),

4) 어촌어항법(2003.1.1.시행)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항법(1969년 제정)으로 추진되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1.1. 시행) 등이 있다.

(4) 어촌관련 법률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간 관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어촌주민 스스로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정비, 경관관리, 도어교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을 특화시키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에서 자생적 발전을 토대로 하는 마을정비, 경관관리, 도어교류 모두 어촌개발 관련 법률에서 독립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사업영역과 법적근거에서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특별법의 법적 지위와 법률의 제정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현행 타 법률과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한 점은 추후 이 법의 개정방향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그림 2-11 | 어촌관련 법률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관계도

3.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국내외 지역정책의 동향과 어촌관련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설정하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자체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개발사업에서 공모방식 형태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의 새로운 지역정책은 지역특성과 자산을 활용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자율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농어촌이 직면한 시장개방 등 대외적인 문제와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내부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6차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넷째, OECD 국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고 정책목표를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시장개방과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6차산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하향식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단위 개발위주로 추진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상향식 개발방식, 광역단위 다층위적 개발로 전환됨으로써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자생적 발전을 토대로 하는 마을정비, 경관관리, 도어교류가 현행 타 법률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차별성을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시사점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제 3 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안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1) 어촌관련 법률과의 차별성 강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제정 당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다. 입법 당시 관련부처의 의견조회 결과⁵⁾ 농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과 제정 취지나 목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다. 이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사업내용이 입법추진 과정에서부터 어촌관련 법률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최근 제정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목적, 사업방식, 사업주체 등 유사성으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 시 중복논란과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의 차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어촌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어촌특화발전 개념 재정립

어촌은 WTO-DDA 협상,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등 어촌정체가

5)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검토보고」, p.47

침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 국내외 지역정책에서 대두되고 있는 화두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내생적 발전을 키워나가는 ‘6차산업화’ 방안이다. 농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1차산업인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개발에 6차산업화 도입은 규모화, 시장의 범위 확대(신 시장 창출), 지역의 특성화를 제고시키는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해 가장 핵심적이었던 ‘어촌특화’ 개념이었던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재개발, 경관관리, 도어교류)에 어촌 6차산업화까지 확대시키는 ‘어촌특화발전’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새로운 정책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용어 등 조문의 정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제2조(정의) 용어, 제32조(어촌신용조합)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특화어촌’, ‘어촌특화’, ‘특화어촌위원회’, ‘어촌특화사업’,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등 비슷한 용어와 명확하지 못한 개념 정의로 혼선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법 제32조(어촌신용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제2항⁶⁾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자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삭제 또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6)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1) 개요

가. 일부개정(안) 개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① 목적, ② 사업주체, ③ 사업영역, ④ 사업방식, ⑤ 지원내용, ⑥ 사업구역 지정관리, ⑦ 관리·감독, ⑧ 평가·환류에 관해서 개정하고자 한다.

표 3-1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개요

현행	vs	개정(안)
어촌주민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생적 발전 도모	목적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수산업의 고부가치화 기반 마련을 통해 소득증대 및 어촌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특화어촌위원회)	사업주체	어촌공동체+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회(어촌특화발전위원회)
주민주도 마을정비(마을만들기, 경관관리, 도어교류)	사업영역	주민주도 마을정비(마을만들기, 경관관리, 도어교류) + 어촌자원 다각화·고도화·고부가가치화(어촌 6차산업화)
특화어촌위원회 사업 건의	사업방식	어촌특화발전위원회 사업 건의
없음	지원내용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 지원·용자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지정·관리	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준공검사	관리감독	시행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없음	평가·환류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차등 지원

나. 어촌특화사업(현행)과 어촌특화발전사업(개정안) 개념 비교

(가) 어촌특화사업(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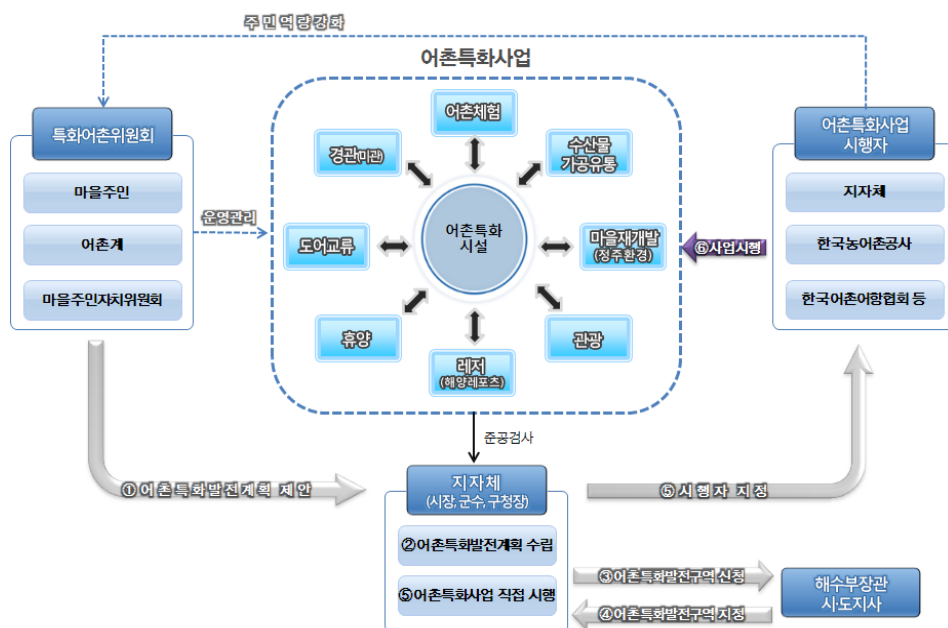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한 어촌특화사업은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사업의 제안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부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사업시행 전에 받으면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준비과정을 마치게 된다.

①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진 특화어촌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제안하고, ②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후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에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신청을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가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⑤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⑥해당 지자체로부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어촌특화사업(어촌체험, 수산물 가공유통, 마을재개발, 관광, 레저, 휴양, 도어교류, 경관)을 시행 후 준공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어촌특화사업은 완료된다.

현행 어촌특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촌체험, 수산물 가공·유통, 관광, 레저, 휴양, 마을재개발, 경관관리, 도어교류 등이 과연 어촌특화사업으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어촌특화사업은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들과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특화어촌위원회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사업시행 전에 받고 사업을 건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기존 사업방식에서 시행지침의 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어촌특화사업이 어촌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장개방 압력, 소득 정체, 일자리 감소 등 대내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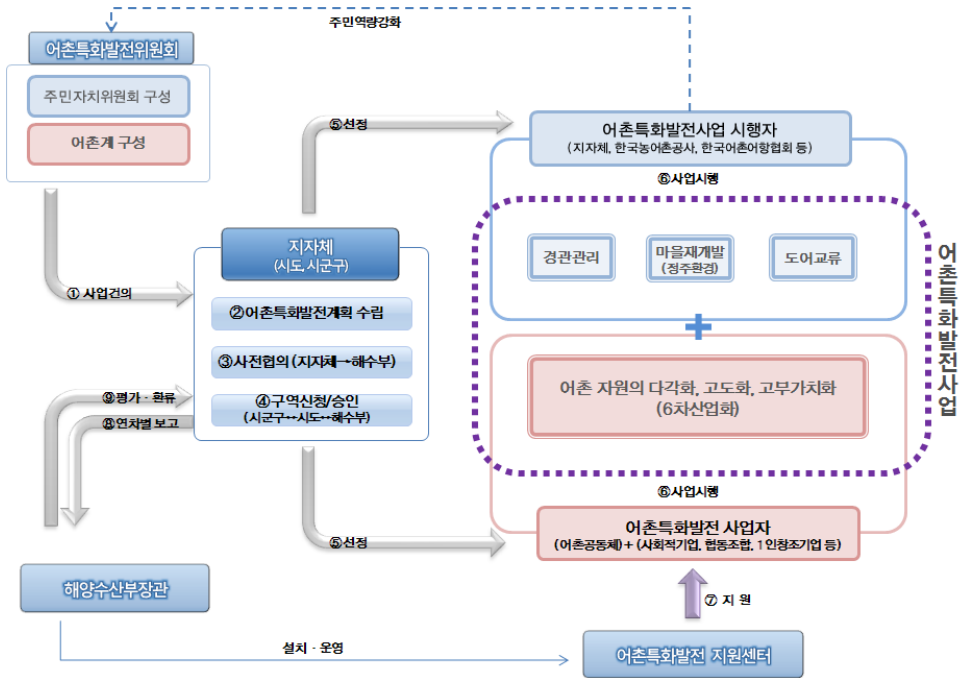
| 그림 3-1 | 어촌특화사업 추진 개념도 (현행)

(나) 어촌특화발전사업(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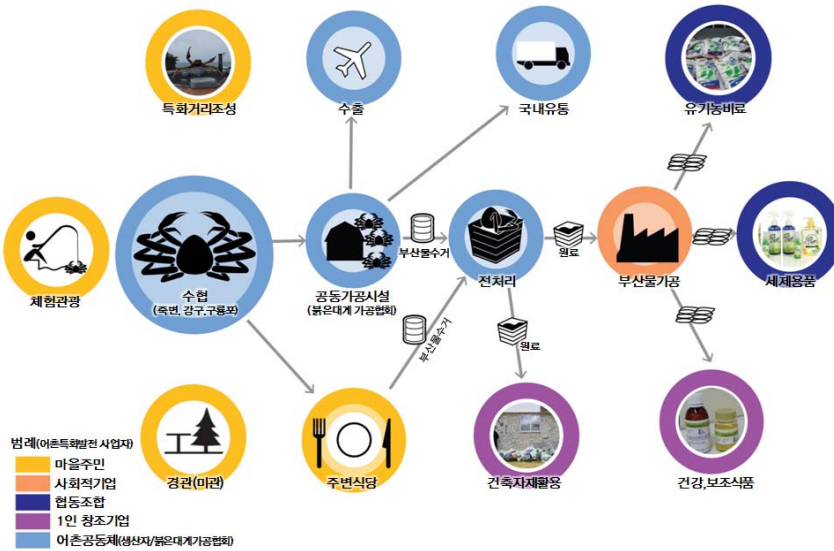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의한 어촌특화발전사업도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사업의 제안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부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사업시행 전에 받음으로써 준비과정을 마치는 것은 동일하다.

①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진 어촌특화발전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제안하고, ②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후 ③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정책목표와 사업집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④사전협의 절차가 끝나면, ④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에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신청하고 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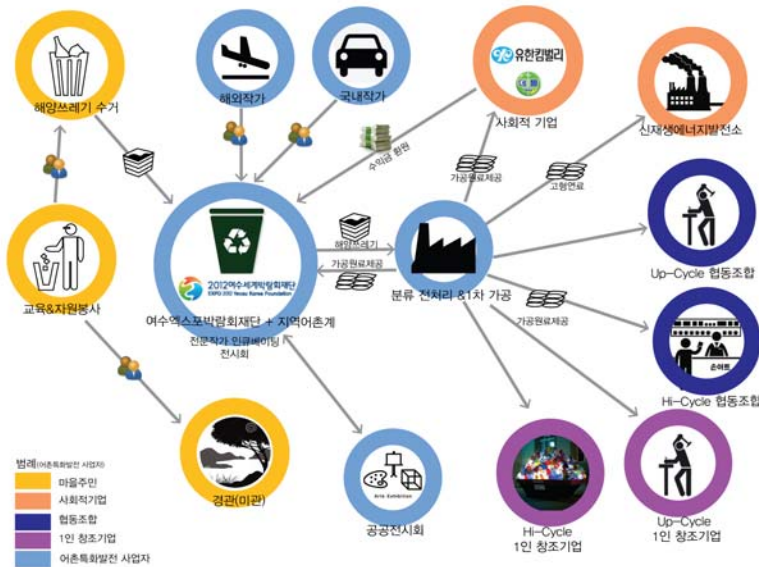
⑤ 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 내용을 토대로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 사업자를 지정한다. ⑥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어촌특화발전 사업을 시행한다. ⑦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추진에 따라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⑧ 사업진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별 보고 후 ⑨ 평가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완료한다.



| 그림 3-2 | 어촌특화발전사업 추진 개념도 (개정안)



| 그림 3-3 | 경북 붉은대게를 활용한 어촌특화발전사업 개념도(예시안)



| 그림 3-4 |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어촌특화발전사업 개념도(예시안)

2) 주요 개정내용

(1) 어촌특화발전 개념 재정의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가. “어촌특화발전”의 개념적 정의(개정안 제2조)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어촌특화”에 대한 개념은 ‘공동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어촌자원을 해당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모호해 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반면 개정(안)은 현행 “어촌특화”를 “어촌특화발전”으로 변경하고 그 개념을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와 6차산업화(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였다. 특히 개정(안)은 기존 “어촌특화”의 개념에 6차산업화 개념으로 확장시켜 “어촌특화발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폭 넓게 정의하였다.

표 3-2 | 제2조(정의) “어촌특화발전” 정의 신규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2. "어촌특화"란 공동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화어촌을 그 자원(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어촌특화발전"이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u>주민주도의 마을정비와 어촌의 자원</u> (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u>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u> 을 말한다.

6차산업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 3-3>과 같이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일본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교·검토하였다.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차산업화를 “농촌산업”으로 명칭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농·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연계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일본 농산어촌의 6차산업화는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로 명칭하고, 그 정의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으로 생산 및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3-3 | 6차산업화에 대한 국내외 관련법을 검토

법률명 [제정일자]	소관부처	정의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국회 소관위 심사중]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u>농촌산업</u> ”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u>농촌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u> 및 이와 관련된 <u>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u> 을 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0.12.3.]	일본 농림수산성	“ <u>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u> ”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을 꾀하기 위해 <u>단독 또는 공동 사업으로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u> (농림수산물 등을 신상품의 원재료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집과 그 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 5항 제1호에 대해서도 같다.) <u>및 그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u> 활동이며, <u>농림수산물 등의 가치를 높이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낳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u> 말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안) [개정(안) 검토중]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u>어촌특화발전</u> ”이란 어업인 또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u>주민주도의 마을정비와 어촌의 자원</u> (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u>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을</u> 말한다.

나. “어촌특화발전”의 재정의에 따른 제1조(목적)의 개정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신뢰와 협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률의 제1조(목적)은 [공간적 대상], [지원내용], [궁극적 목표]로 정리되는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궁극적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다. 동법과 유사한 ‘○○지원 특별법’의 제1조(목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 유사 지원 특별법의 제1조(목적) 비교

구분 [소관부처/제정일자]	공간적 대상	지원내용	궁극적 목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2000.1.21.]	낙후된 접경지역	새로운 성장동력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 보전관리	국가 경쟁력 및 지역균형 발전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2011.1.28.]	서해5도	생산 소득 기반시설 장려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1996.3.30.]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2013.6.14.]	도시지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2012.5.23.]	어촌지역	어촌의 자생적 성장기반	없음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한, “어촌특화발전”의 개념이 어촌 6차산업화까지 포함된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내용에 ‘어촌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에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을 추가하고 궁극적 목표에는 ‘소득증대’ 및 ‘어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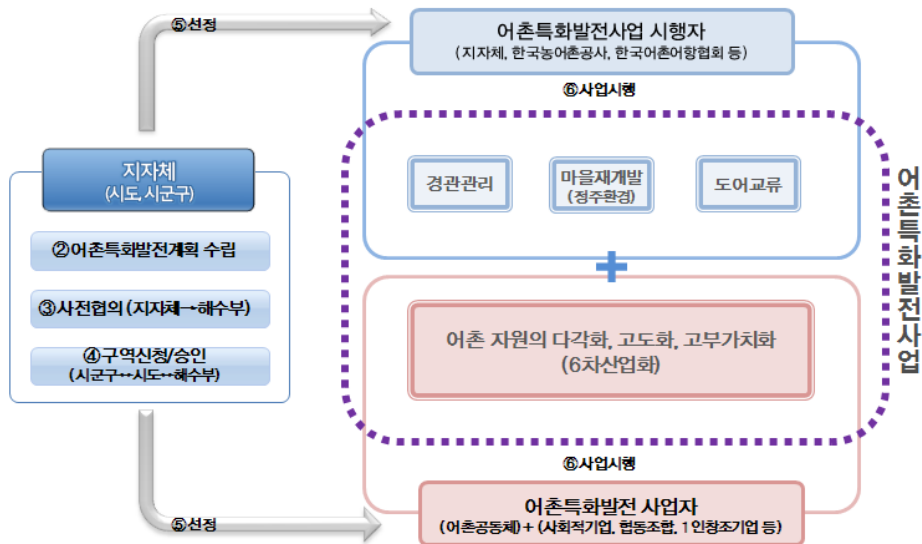
| 표 3-5 | 제1조(목적)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어촌 경쟁력 강화를 _____ _____.

다.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관련 신설된 규정(개정안 제15조)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자(시장·군수·구청장)가 주민주도의 어촌마을 정비사업을 통해 ‘어촌특화’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만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개정(안)에서는 ‘어촌특화발전’에 주민주도의 어촌마을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어촌의 6차산업화까지 포함된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현행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가 6차산업화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를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하다. 즉,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자(시장·군수·구청장)가 주민주도의 어촌마을 정비사업과 어촌 6차산업화를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와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분리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자는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주도의 어촌마을 정비사업(마을 정비, 경관관리, 도어교류 등)을 시행하고, 사업자는 어촌 6차산업화를 시행하도록 이원화하여 사업추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3-5 |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이원화(시행자 vs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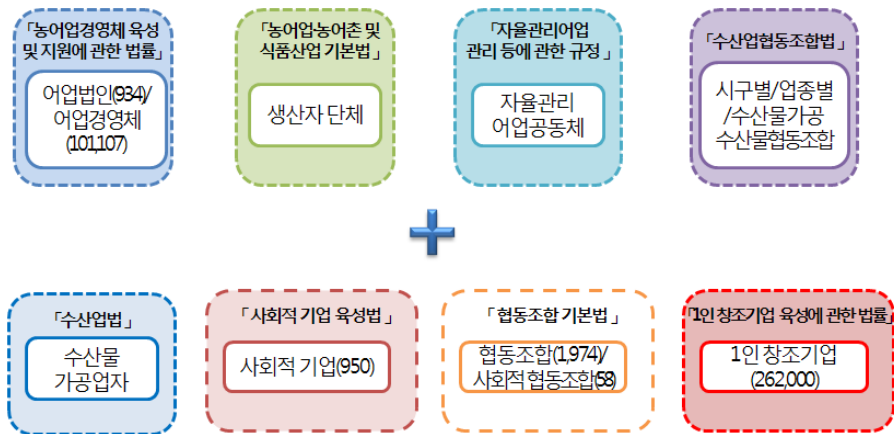
| 표 3-6 | 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신설 조항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① 어촌 특화발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사업내용과 성격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어촌특화발전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어촌특화발전사업자 관련 규정 신설(개정안 제16조)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동법 개정(안)에서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어촌특화발전사업자는 어촌공동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또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율관리공동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로 한정하였다. 다만, 6차산업화의 특성상 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1인창조기업과 연대하여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들이 어촌공동체를 배제하고 어촌특화발전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여 자본과 기술력에서 취약한 어촌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고려하였다.



| 그림 3-6 | 어촌특화발전사업자 대상

| 표 3-7 | 제1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 신설 조문 신규 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 중 제1항을 제외한 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구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6.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7.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각기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마.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개정(개정안 제9조)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7조 제3호는 ‘교류·관광·미관·휴양·레저·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을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 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동법 일부개정안에는 어촌특화발전 관련 실태조사, 마을정비에 관한 사항,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방안, 어촌특화발전사업과 다른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표 3-8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에 관한 신설 조항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삭제> 3. 교류·관광·미관·휴양·레저·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삭제>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삭제>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이행에 필요한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삭제> 8. <u>재원조달계획</u> 9.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p>제9조(발전계획의 내용) 발전계획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어촌특화발전구역 2. 어촌특화발전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신설> 3. 어촌특화발전 관련 실태조사<신설> 4.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마을정비에 관한 사항<신설> 5.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방안<신설> 6. 어촌특화발전사업과 다른 사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7. 발전계획_____ 8. 발전계획_____, 역할_____ 9.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타당성에 관한 사항<신설> 10.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어촌특화발전 추진절차의 개선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한 어촌특화사업은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사업의 제안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부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사업시행 전에 받으면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준비과장을 마치게 된다.

①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진 특화어촌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제안하고, ②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후,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에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신청을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가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⑤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⑥해당 지자체로부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어촌특화사업(어촌체험, 수산물 가공유통, 마을재개발, 관광, 레저, 휴양, 도어교류, 경관)을 시행 후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어촌특화사업은 완료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의한 어촌특화발전사업도 어촌특화발전위원회가 어촌특화사업의 제안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부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사업시행 전에 받음으로써 준비과정을 마치는 것은 동일하다.

①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진 어촌특화발전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제안하고, ②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후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에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신청하고 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④해당 지자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 내용을 토대로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 사업자를 지정한다. ⑤해당 지자체로부터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시행한다. ⑥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추진에 따라 어촌특화발전 지원센

터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⑦사업진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별 보고 후 ⑧평가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어촌특화발전 사업을 완료하는 절차로 개정하였다.



| 그림 3-7 |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절차 개정 전·후 비교

가. 계획수립 주체(개정안 제8조 제1항)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의 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되지만 동법 개정안에서는 어촌 6차산업화의 특성상 사업의 다각화·고도화 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주체가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본 개정(안)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 제4조7)에 근거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매 5년마다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3-9 |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주체 및 절차 개정 조항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변경하는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p>	<p>제8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_____ 어촌의 수산·어촌자원 _____ 어촌 특화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_____.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역시장·시도지사가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② _____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어촌특화발전계획 심의기구의 변경(개정안 제8조 제3항)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변경 시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관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8조 제2항에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승인 신청 시 「수산업법」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경관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어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 어촌 6차산업화와 같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마련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수립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였다.

Ⅱ 3-10 | 어촌특화발전계획 심의기구 변경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계획 및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경관 보존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때에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8조(발전계획의 수립)</p> <p>③ _____이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다.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강화 규정 신설(개정안 제45조)

어촌특화발전사업은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4조(보고·검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보고 및 검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w[46조(보고 및 검사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보다 자세한 입법사례는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표 3-11 |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자 또는 사업자의 사무실, 작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촌특화발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시행자 또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라. 사업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근거마련(개정안 제46조)

어촌특화발전사업은 마을재개발, 어촌 6차산업화 등 사업 성격상 다년도에 걸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사업평가에 대한 규정 없이 준공검사 후 어촌특화발전사업이 종료 되도록 하고 있어 중간점검에 따른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개정안은 어촌특화발전사업이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1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다년도에 걸쳐 추진된다. 따라서 어촌특화발전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사업성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성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사례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정비사업 성과의 평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원효과 평가)를 참조하였다.

| 표 3-12 | 어촌특화발전사업 성과평가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4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성과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자생적 성장 지원 및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p>

마. 어촌특화발전구역 해제를 위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12조)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통해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구역을 지정·변경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촌특화발전사업이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를 지정 해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어촌특화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의해 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된 입법사례는 「기업도시 개발 촉진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정비구역의 해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등이 있다.

| 표 3-13 | 어촌특화발전구역 지정해제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2조(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발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어촌특화발전구역을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2. 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어촌특화발전 지원내용 신설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어촌특화발전에 관한 지원내용이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보다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간접적인 지원(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기술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방안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② 보조 및 융자, ③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내용을 유사관련 법률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지원 특별법’은 해당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내용과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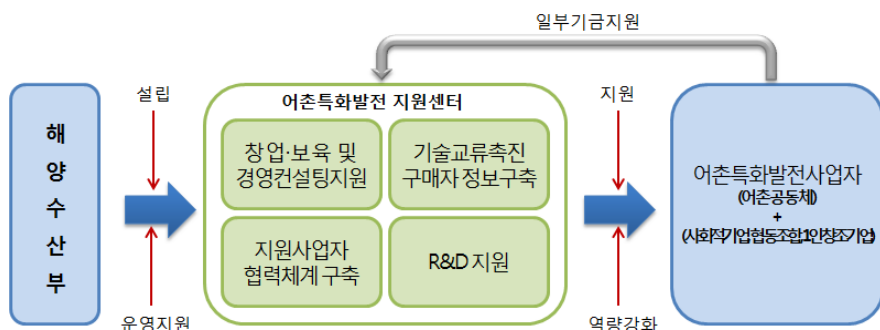
| 표 3-14 | ‘유사 지원 특별법’ 지원내용 비교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재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1996.3.30.]	제15조(재정지원) 제23조(조세의 감면)	균특회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00.1.21.]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11.1.28.]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3.6.4.]	제39조(보조 및 융자)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3.6.14.]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도시재생 특별회계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추진중]	제20조(농촌산업 창업지원) 제25조(금융 지원) 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미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2012.5.23.]	없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유사 지원 특별법’은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조뿐만 아니라 용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유사한 지원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재원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지원내용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동법의 개정(안)은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보조 및 용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개정안 제31조)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수산·어촌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그림 3-7>과 같이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발전구역 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실제 어촌특화발전사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원센터가 어촌공동체에 밀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어촌특화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는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자 협력체계 구축, 기술교류 촉진·구매자 정보구축 및 R&D 연구 등을 어촌특화발전사업자에 지원하여 어촌마을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그림 3-8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개념도

이와 관련된 입법사례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 제2항(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업인등 지원센터·어업인등 지원센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이 있다. 세부적인 입법사례는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 표 3-15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지원관련 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발전구역 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특화발전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발전 관련 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풀 구축 3. 어촌특화발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4. 기술교류 촉진, 구매자 정보구축 등의 지원 5.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구역 내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나. 보조 및 융자(개정안 제32조)

개정안은 어촌 6차산업화의 기반마련을 위해 어촌특화발전사업자에게 ①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공동 생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②공동 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 ③공동 마케팅·홍보·판매 지원, ④창업자금 융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조 및 융자와 관련된 입법사례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금지원 등),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26조(세제 및 자금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 지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보조 및 융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및 융자), 「도청이

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자금지원 등),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등이 있다.

| 표 3-16 | 보조 및 용자 지원에 관한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32조(보조 및 용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공동 생산·판매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2. 공동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매 지원 4. 어촌특화발전 관련 사업자의 창업자금 용자 5.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사항

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개정안 제33조)

대부분의 ‘유사 지원 특별법’의 지원관련 규정에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개정안은 유사법률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된 입법사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1조(조세의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

조(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 제2항(조세의 감면),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등이 있다.

표 3-17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신설 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타 조문 정비 및 삭제

가. 용어의 변경(개정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어촌특화발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용어를 일관되게 개정하였다.

표 3-18 용어의 변경에 대한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어촌특화	<u>어촌특화발전</u>
특화어촌위원회	<u>어촌특화발전위원회</u>
어촌특화사업	<u>어촌특화발전사업</u>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u>어촌특화발전구역</u>

나. 제5조(특화어촌 책무)의 삭제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특화어촌은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표 3-19 | 특화어촌 관련 규정에 대한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u>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경관의 보존·형성·관리(이하 "경관 보존 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u>	<삭제>

다. 제32조(어촌신용조합) 조문 삭제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2조(어촌신용조합) 규정은 수협의 신용조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제2항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영세·소규모의 어촌의 제정여건과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어촌신용조합을 자체적 설립·운영하는 것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였다.

8)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표 3-20 | 어촌신용조합 관련 규정에 대한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u>제32조(어촌신용조합)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 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지방자치단체·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이용 자격·조직·출연·운영·감독·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삭제></p>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생산기반 확충, 어업외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으로 지역정책에서 사실상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추구하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제정은 어촌정책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마을정비와 어촌관광 등 기존의 사업내용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 검토했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 제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에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시행일자 2013.5.24)」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동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지역정책 동향과 어촌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개정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등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6차산업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 어촌관련 법령들은 정주환경,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제·개정되었으나 소득·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은 거의 없어 다양한 어촌개발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갖고 있는 용어의 모호성, 지원관련 규정의 신설 필요성 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개정방향을 설정하였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은 현행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에 어촌 6차산업화까지 포함하여 ‘어촌특화발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총 40개 조문 가운데 7개 조문의 개정하고, 8개 조문 신설하였다. 또한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와 제32조(어촌신용조합) 등 2개 조문은 삭제하였다.

특히, 어촌특화발전의 지원과 관련해서 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제32조(보조 및 융자), 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은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수산·어촌자원의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주민주도의 농어촌 개발」과 관련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지원하였다. 향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정책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따른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는 정부·지자체와 어촌공동체 사이의 중간조직으로 어촌 6차산업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는 어촌 6차산업화를 인큐베이팅 하는 전담기구 이외에 어촌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공동체의 마케팅·경영 지원 부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어촌공동체가 정부나 지자체의 어촌관련 사업을 지원 받은 후에 마케팅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운영·관리가 부실화⁹⁾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농촌경영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농촌경영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s Scheme, RES)」을 통해 농촌사회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농촌경영 컨설팅’ 제도를 통해 회계, 재무, 재배, 가공, 유통 등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6차산업 지원센터’는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에 총 50개소의 6차산업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국내외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시설이나 보조사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9) ('12년) 퇴출 어촌체험마을 18개소, 어촌종합개발(수익시설) 임대·방치시설 61개소 등

실제 어촌공동체의 경영·마케팅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1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 방안

구분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어촌경영지원
사업대상	어촌체험마을 완료 후 운영하는 마을 (체험마을 114개소)	어촌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공동체 전체
전문가 (분야)	1인 (어촌관광 전문가, 수산전문가, 컨설팅 회사 등)	최소 6인 이상 (생산, 유통, 가공, 관광, 경영, 디자인)
지원기간	6개월 (월 100만 원, 10만원 자부담)	성공 시 까지 (마을 당 1억 원 또는 매출액 〇%)
사업추진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2) 개정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1) 개정안 입법추진 지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13년 연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방침을 확정하고,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후 최종적으로 2014년 6월말까지 국회제출 하는 일정에 맞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규제 심사에 앞서 개정안과 관련된 하위법령 정비와 비용추계서(안)를 마련한다.



| 그림 4-1 | 어촌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일정

(2) 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제2조 제2호에 따라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와 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개정안 제31조)과 ②어촌특화발전사업의 보조 및 융자(개정안 제32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어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및 어촌특화발전 사업비로서, 추가 재정소요는 어촌특화발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신축비, 자산취득비 및 어촌특화발전 사업비이다.

〈 비용추계방법 〉

추가재정소요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비(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실
임차·신축비 + 자산취득비) 및 어촌특화발전 사업비

나.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개정안 제32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는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직으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예산현황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동 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산출하였다. 24명으로 구성되는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실 임차·신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인건비

개정안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업무를 참고하여 조직 및 인원을 가상적으로 구성해보면 <표 4-2>과 같다.

| 표 4-2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인력 및 업무분장

조직	업무	총원	구성원
센터장	센터 업무총괄	2	센터장 1인, 비서 1인
정책지원팀	어촌특화발전 총괄 예·결산, 인사, 물품·시설관리 등	6	팀장 1인, 팀원 5인
어촌특화발전 사업팀	창업보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 기술교류 촉진, 구매자 정보 구축 지원	8	팀장 1인, 팀원 7인
어촌특화발전 관리팀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풀 구축 등	8	팀장 1인, 팀원 7인
합 계		24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인건비는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2014년 기준 1인당 평균연봉 4,416만 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에 따라 인건비 상승률¹⁰⁾을 적용하였다.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직원 24명의 2015년 인건비 총액은 11억 3,500만 원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인건비는 65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4-3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인건비 재정소요(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인력수(명)	24	24	24	24	24	-
1인당 인건비(만원)	4,730	5,065	5,425	5,810	6,222	27,252
소요비용 (백만원)	1,135	1,216	1,302	1,394	1,493	6,540

10) 인건비 상승률 2011년 7.2%, 2012년 이후 7.1%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08, p.323)

(나)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는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가 어촌특화발전의 지원, 관리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시설건물관리기관¹¹⁾의 단가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시설물관리기관의 운영비는 인건비 대비 34.6%이다. <표 4-3>은 인건비 소요액에 운영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도별 운영비 소요액으로서 2013년 경상운영비는 3억 9,300만 원이 될 것이고 향후 5년간 22억 2,63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운영비 재정소요(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운영비 (백만원)	393	421	450	482	517	2,263

(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센터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집기, 사무용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으로서 시설건물관리기관의 평균 자산취득비가 900만원(2006년 기준)이므로 여기에 10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5년 1인당 1,173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구성원 24명의 자산취득비는 약 2억 8,28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취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취득연도인 2015년 한 해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사무실 임차·신축비

사무실은 업무를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설계하여 2017년에 완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무실 임차비

11)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6. p.138.

가 투입된다. 사무실 신축비용은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산출하고, 임차비의 경우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사무실은 서울 지역에 위치하고 기존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평균사무공간이 1인당 약 69.04㎡인 것을 고려하면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사무공간은 약 1,657㎡(24×69.04㎡)로 추정된다. 2012년 세계 주요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 오피스 임대료는 ㎡당 3만 589원으로 월 임차료가 연간 6억 823만 원(1,657㎡ × 30,589 × 12개월)이 된다. 여기에 임차료 상승률 연 3.5%를 적용하면 2015년 사무실 임차료는 약 7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 설계비와 공사비는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참조하였다.

표 4-5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임차비·신축비 재정소요(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임차비	756	782	809	-	-	2,347
신축비	-	37	1,328	-	-	1,365
합계	756	819	2,137	-	-	3,712

(마)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의 추계 결과 2015년에 25억 6,600만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27억 9,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6 |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치·운영비(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백만원)	2,566	2,456	3,889	1,876	2,010	12,797

다. 어촌특화발전 사업비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개정안 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와 제1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①주민주도의 마을정비사업과 ②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사업은 주민주도 마을정비사업과 어촌 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10개소씩 3개년에 걸쳐 추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 소요액을 산출하였다.

어촌특화발전사업은 주민주도 마을정비와 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3년 동안 10개소씩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소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2년차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하여 총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7 | 어촌특화발전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2015~2019년)

	산출식	계
주민주도 마을정비 (백만 원)	300백만 원(1년) × 10개소 × 3년 300백만 원(1년) × 10개소 × 2년차	15,000
어촌자원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백만 원)	2,700백만 원(1년) × 10개 마을 × 3년 2,700백만 원(1년) × 10개 마을 × 2년차	135,000
합 계(백만 원)		150,000

| 표 4-8 | 어촌특화발전사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어촌특화발전사업 (백만 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라.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어촌특화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2015년 325억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 간 1,6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어촌특화발전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향후 5년 간 총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9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2,566	2,456	3,889	1,876	2,010	12,797
어촌특화발전사업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국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지방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계	32,566	32,456	33,889	31,876	32,010	162,797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권영섭·김창현, “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제고”, 『국토정보』 351, 2011, pp.12-19.
- 김용렬 외, 『일본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김태곤·허주녕,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김태경,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계획제도 선진화와 연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 연구』, 2012.
- _____, 『어촌특화개발 방향 정립 연구』, 2012.
- 문경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반기민·우장명, “충청북도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 『지역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 서윤정, 『6차산업 융복합 산업의 원리와 실제』, HNCOM, 2013.
- 이원섭,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p.47, 2012.
- 타나카 아키오, 『지역브랜드 성공법칙』, 한국생산성본부 정보문화원, 2013.

<인터넷 자료>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www.agri.na.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
- 청와대 www.president.go.kr
- 일본수산청 www.jfa.maff.go.jp

부록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신규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u>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_____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_____</p> <p>_____ 지원하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어촌 경쟁력 강화를 _____.</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촌"이란 「어촌 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p> <p>2. "특화어촌"이란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삭제></p> <p>3. "<u>어촌특화</u>"란 공동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u>특화어촌을 그 자원(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u></p> <p>4. "<u>어촌특화사업</u>"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u>지역사회의 중심점이 되고 대내</u></p>	<p>제2조(정의) _____</p> <p>_____.</p> <p>1. _____.</p> <p>2. "어촌특화발전"이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_____ 주민 주도의 마을정비와 어촌의 _____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촌을 _____.</p> <p><신설></p> <p>3. "어촌특화발전사업"이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_____.</p>

현행	개정(안)
<p>적으로 구성원의 특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삭제></p> <p>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p> <p>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p>	<p>4. "어촌특화발전시설"이란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 제26조에 _____.</p> <p>5. _____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위원회가 어촌특화발전을 _____ _____ _____.</p> <p>6. "어촌특화발전구역"이란 인구감소·고령화·소득정체 등으로 인해 어촌경제가 침체되어 활성화가 필요한 곳으로 어촌의 자원을 융·복합하거나 주민주도의 마을정비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 간에 연계 등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p>
<p>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p> <p>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p> <p>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p>	<p>제3조(어촌특화발전 지향 원칙) ① 어촌특화발전은 어촌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_____.</p> <p>② 어촌특화발전은 _____ _____ _____.</p> <p>③ 어촌특화발전은 _____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u>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u> 경비를 예산에 <u>계상할 수 있다.</u></p> <p>② 지방자치단체는 <u>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u> 책무를 진다.</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_____ 어촌특화발전에 _____ 계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_____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의 경영안정과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경관의 보존·형성·관리(이하 "경관 보존 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p>	<p><삭제></p>
<p><신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촌특화발전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p>	<p>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p>
<p>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① 마을 주민들은 <u>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u>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u>특화어촌위원회를</u> 설립할 수 있다.</p>	<p>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① 어촌공동체는 마을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_____ 어촌특화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_____.</p> <p>_____ 위</p> <p>원회를 _____.</p>

현행	개정(안)
<p>② <u>특화어촌위원회의</u>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위탁 또는 감독<삭제> 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보수·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전달·확인<삭제>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u>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 협약의 체결 및 이행</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p>③ <u>특화어촌위원회</u>는 법인으로 하며 공단체를 지향한다.<삭제></p> <p>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u>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u>특화어촌위원회의</u> 설립·조직·등기·운영·해산·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위원회의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_____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나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신설>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사업성과 보고 <신설>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 <신설> _____ 사회적 자본의 증진 _____ <p>③ 광역시장·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_____ _____.</p> <p>④ 위원회의 _____ _____ _____.</p>
<p>제28조(주민제안 등) ① <u>특화어촌위원회</u>는 마을지도자·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구상이나 제안</p>	<p>제7조(주민제안 등) ① 위원회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②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u>특화어촌위원회</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_____.</p> <p>③ 위원회는 _____.</p> <p>_____.</p> <p>④ _____ 위원회를 _____.</p> <p>_____.</p> <p>⑤ _____.</p> <p>_____.</p>
<p>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u></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변경하는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u>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계획 및 「연안관리법」 제9조에</u></p>	<p>제8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 내 수산·어촌자원 현황과 _____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② _____ 발전계획을 _____.</p> <p>_____.</p> <p>③ _____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p>

현행	개정(안)
<p><u>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경관 보존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때에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립·변경할 때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신설></p> <p>⑤ _____ 발전계획을 _____.</p> <p>⑥ _____.</p>
<p><u>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u>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삭제> 교류·관광·미관·휴양·레저·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삭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 시설에 관한 사항 <p>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이행에 필요한 재정운용 방안</p> <p>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p>	<p><u>제9조(발전계획의 내용)</u> 발전계획의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구역의 _____ 어촌특화발전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신설> 어촌특화발전 관련 실태조사<신설>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마을정비 및 어촌특화발전시설에 관한 사항<신설>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고부가가치화 방안<신설> 어촌특화발전사업과 다른 사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발전계획의 _____ 발전계획에 _____, 역할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삭제></p> <p>8. <u>재원조달계획</u></p> <p>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9.어촌특화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 타당성에 관한 사항</p> <p>10.그 밖에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_____</p>
<p>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어촌특화발전계획</u>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u>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2곳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u>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물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2곳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도수산물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p> <p>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물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삭제></p>	<p>제10조(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 신청) _____</p> <p>_____발전계획을 _____</p> <p>_____시·도지사에게 어촌특화발전구역의 _____</p> <p>_____. 다만,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구역이 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p> <p>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u>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u>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u>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p>	<p>제11조(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 ① _____ 제10조에 _____</p> <p>어촌특화발전구역을 _____</p> <p>_____.</p> <p>② _____ 어촌특화발전구역을 _____</p> <p>_____, _____</p> <p>_____.</p> <p>③ _____</p> <p>_____, _____</p> <p>_____.</p> <p>④ _____ 어촌특화발전구역의 _____</p> <p>_____, _____</p> <p>_____.</p>
<p><신설></p>	<p>제12조(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발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어촌특화발전구역을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촌특화발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p>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어촌특화발전계획</u>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어촌특화발전계획</u>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u>어촌특화발전계획</u>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u>어촌특화발전계획</u>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p>	<p>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_____ 발전계획의 _____.</p> <p>② _____ 발전계획의 _____.</p> <p>③ _____ 발전계획에 _____. 발전계획은 _____.</p>
<p>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변경된 <u>어촌특화발전계획</u>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1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p> <p>① _____ 발전계획의 _____.</p>

현행	개정(안)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착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가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③ _____ _____ _____ _____.</p> <p>④ 위원회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3장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신설>	<p>제15조(어촌특화발전사업의 시행) ① 어촌특화발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p>

현행	개정(안)
	<p>의 사업내용과 성격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어촌 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u></p>	<p>제1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및 어촌특화발전사업자) ①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중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사업은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_____에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p>②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중 제1항을 제외한 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현행	개정(안)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자 6.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7.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17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_____ 발전계획을 _____. ②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는 _____.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어촌특화사업 시행자</u>"로 본다.</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_____.</p>
<p>제15조(지정·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u></p> <p>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p>	<p>제19조(지정·결정의 의제) 제11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구역이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p> <p>2.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3. _____</p> <p>_____</p> <p>_____</p> <p>4. 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관리계획의 결정</p> <p>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p> <p>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p> <p>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p>	<p>5. _____</p> <p>_____</p> <p>6. _____</p> <p>_____</p> <p>7. _____</p> <p>_____</p>
<p>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면허·해제·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p>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p>	<p>제20조(인·허가 등의 의제) 발전계획을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발전계획을 _____</p> <p>_____.</p> <p>1. _____</p> <p>_____</p> <p>_____</p> <p>2. _____</p> <p>_____</p> <p>_____</p> <p>3.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실시계획의 승인·고시</p> <p>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p> <p>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p> <p>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p> <p>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p> <p>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p> <p>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p> <p>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p>	<p>4. _____</p> <p>5. _____</p> <p>6. _____</p> <p>7. _____</p> <p>8. _____</p> <p>9. _____</p> <p>10. _____</p> <p>11. _____</p> <p>12. _____</p>

현행	개정(안)
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3. _____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_____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5. _____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_____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17. _____
1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_____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_____
20.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0. _____
2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_____
2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22. _____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_____

현행	개정(안)
<p>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신고 또는 협의</p> <p>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p> <p>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2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24. _____ _____ _____</p> <p>25. _____ _____ _____ _____</p> <p>26. _____ _____</p> <p>27.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28.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2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에,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신설></p>
<p>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u></p>	<p>제21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_____ _____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u>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u>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u>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u>의 사·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p>	<p>②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발전사업의 _____.</p> <p>③ _____ _____ _____. 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구역이 _____ _____. _____.</p>
<p>제18조(행위제한 등)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p>	<p>제22조(행위제한 등) ① 제11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②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p> <p>2. _____ _____</p> <p>③ _____</p>

현행	개정(안)
<p>로서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u>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	<p>_____어촌특화발전구역의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④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p>	<p>제23조(환지 등) _____발전계획의</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20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배수로·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공유의 도로·배수로·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p>	<p>제24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특화발전사업은 _____</p> <p>_____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는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②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p> <p>③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u> 국유인 일반 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 불구하고 <u>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u>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_____.</p> <p>③ 어촌특화발전구역의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에게 _____</p> <p>_____.</p>
<p>제21조(준공검사) ① <u>어촌특화사업</u> 시행자가 <u>어촌특화사업</u>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u>어촌특화사업</u>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u>어촌특화사업</u>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u>어촌특화사업</u>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u>특화어촌위원회</u>에 알려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준공검사) ①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이 _____</p> <p>_____.</p> <p>②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위원회에 _____.</p> <p>③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u>어촌특화사업</u>을 마친 경우 <u>어촌특화사업</u>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제26조(어촌특화발전시설의 지정)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에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 _____</p>

현행	개정(안)
<p>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u>어촌특화사업의</u>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u>어촌특화시설에</u>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각 2. 임대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p>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u>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 또는 <u>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u>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처분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다.</p> <p>③ <u>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u>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상환 및 <u>어촌특화시설의</u>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어촌특 	<p>제27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어촌특화발전사업의_____어촌특화발전시설에_____ _____ _____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가 _____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p>②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구역에_____ _____ _____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구역_____</p> <p>③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가_____ _____ _____.</p> <p>④ _____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의_____ 2. _____ 어촌특

현행	개정(안)
<p><u>화사업</u>의 시행</p> <p>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p> <p>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p>	<p>화발전사업의_____</p> <p>3. _____</p> <p>4. _____</p>
<p>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① <u>어촌특화시설</u>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u>어촌특화시설관리자</u>"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u>어촌특화시설관리자</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다.</p> <p>③ <u>어촌특화시설관리자</u>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어촌특화시설</u>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어촌특화시설</u>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p> <p>2. <u>어촌특화시설관리자</u>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p> <p>3. <u>어촌특화발전시설</u>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p> <p>⑤ <u>어촌특화시설관리자</u>는 직접 또는 지방</p>	<p>제28조(어촌특화발전시설의 관리·처분) ① 어촌특화발전시설은 제16조제1항_____</p> <p>_____ "<u>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u>" _____</p> <p>_____.</p> <p>②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는_____</p> <p>_____.</p> <p>③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발전시설에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의_____</p> <p>_____.</p> <p>④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어촌특화발전시설의_____</p> <p>_____</p> <p>2.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의_____</p> <p>_____</p> <p>3. 어촌특화발전시설을_____</p> <p>_____</p> <p>⑤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는 _____</p>

현행	개정(안)
<p>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u>어촌특화시설</u>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p>	<p>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을 _____</p> <p>_____.</p> <p>⑥ _____</p> <p>_____</p> <p>_____.</p>
<p>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u>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을</u>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u>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u>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u>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부터 <u>어촌특화시설을</u>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 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어촌특화발전시설의 목적 외 사용)</p> <p>①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발전시설을 _____</p> <p>_____.</p> <p>다만,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발전시설의 _____</p> <p>_____.</p> <p>② _____</p> <p>_____.</p> <p>③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발전시설을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을 _____</p> <p>_____.</p> <p>④ _____</p> <p>_____.</p> <p>⑤ 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u>어촌특화시설</u>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어촌특화시설</u>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u>어촌특화시설</u>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u>어촌특화시설</u>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p>제30조(어촌특화발전시설의 지정 폐지) _____</p> <p>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의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특화발전시설에서_____ 2. 어촌특화발전시설을_____ 3. _____ 어촌특화발전시설
제4장 특화어촌 지원	제4장 어촌특화발전의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발전구역 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특화발전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발전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풀 구축 3. 어촌특화발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4. 기술교류 촉진, 구매자 정보구축 등의 지원

현행	개정(안)
	<p>5.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구역 내 어촌특화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설>	<p>제32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공동 생산·판매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2. 공동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매 지원 4.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의 창업자금 융자 5.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사항
<신설>	<p>제3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제29조(생태·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p>제34조(생태·환경의 보전) 제8조에 _____ 발전계획의 _____</p> <p>_____.</p>
제30조(지역 간 교류)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위락·체험	<p>제35조(지역 간 교류) ① 위원회와 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특화어촌위원회</u>와 공동으로 체험·위락·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u>특화어촌위원회나</u>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체험·휴양·숙박·음식·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p>	<p>_____</p> <p>_____</p> <p>② _____ 위원회와 _____</p> <p>_____</p> <p>_____</p> <p>③ _____ 위원회나 _____</p> <p>_____</p> <p>_____</p>
제5장 재정·금융	제5장 재정·금융
<p>제31조(자기부담 등) ① <u>특화어촌위원회</u>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 다)의 일부를 부담한다.</p> <p>② <u>특화어촌위원회</u>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운용·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자기부담 등) ① 위원회는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② 위원회는 _____</p> <p>_____</p> <p>_____</p> <p>③ _____</p> <p>_____</p> <p>_____</p>
<p>제32조(어촌신용조합) ① <u>특화어촌위원회</u>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u>특화어촌위원회</u>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이용자격·조직·출연·운영·감독·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6장 보칙
<p>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37조(연계지원) _____ _____ _____.</p>
<p>제3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사업의 위탁) ①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을 _____ _____ 제16조 제1항_____ ② 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발전계획에 따른 위원회의 _____ 제16조 제1항_____ ③ _____ _____ _____.</p>
<p>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제39조(채권발행) _____ 어촌 특화발전사업 시행자는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제36조(조례의 제정) 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0조(조례의 제정) ① 어촌특화발전구역으로 _____</p> <p>_____ 발전계획의 _____</p> <p>_____ 위원회의 _____.</p> <p>② 어촌특화발전을 _____</p> <p>_____</p> <p>_____.</p>
<p>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1조(벌칙) 제28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발전시설관리자의 _____</p> <p>_____</p> <p>_____.</p>
<p>제38조(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과징금) ① _____ 제2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발전시설을 _____</p> <p>_____</p> <p>_____.</p> <p>② _____</p> <p>_____.</p> <p>③ _____</p> <p>_____.</p>
<p>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p>	<p>제43조(이행강제금) ① _____ 제42조에 _____</p>

현행	개정(안)
<p>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_____.</p> <p>_____.</p> <p>_____.</p> <p>② _____ 제42조제2항 _____.</p>
<p>제40조(공청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포함한다)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면 종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44조(공청회 등) ① _____ (어촌특화발전구역의 _____)</p> <p>_____.</p> <p>② _____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를 _____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를 _____.</p>
<p><신설></p>	<p>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특화발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작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촌특화발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어촌특화발전사업 시행자 또는 어촌특</p>

현행	개정(안)
	화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46조(어촌특화발전사업 성과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구역별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부록 2. 개정안 관련 입법사례

1) 정책심의회 비교(중앙수산조정위원회vs어업·어촌정책심의회)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1953.9.9]	<p>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 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2000.1.28]	<p>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1999.2.5]	<p>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어촌 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및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농어촌 정비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1994.12.22]	<p>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사·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 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2009.4.1]	<p>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04.3.5]	<p>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2) 어촌특화발전구역 해제를 위한 규정 입법사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4.12.31]	<p>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2013.6.4]	<p>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p> <p>④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8.3.28]	<p>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3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2.27]	<p>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p> <p>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2005.1.27]	<p>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4.10.22]	<p>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p> <p>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p> <p>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2008.3.28]	<p>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0.12.29]	<p>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3) 어촌특화발전 지원(지원센터)을 위한 입법사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11]	<p>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p> <p>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미래창조 과학부 [2004.3.22]	<p>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2004.3.5]	<p>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2013.6.4]	<p>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3.6.4]	<p>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동·서·남해 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2.27]	<p>제23조의2(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련 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2006.9.27]	<p>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p> <p>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p> <p>③ 제1항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2008.3.21]	<p>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p> <p>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p> <p>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p> <p>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p> <p>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04.3.22]	<p>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어업인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③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6.3.3]	<p>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 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유희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어촌특화발전 지원(재원보조)을 위한 입법사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2005.5.31.]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 자원부 [2002.12.30.]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지분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거나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2012.1.26]	제14조(자금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호텔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을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 학부 [2011.1.4]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013.4.5]	<p>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4.12.31]	<p>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用水施設)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2004.3.5]	<p>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2013.6.4]	<p>제39조(보조 및 용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비용 및 보상비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3.6.4]	<p>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용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8.3.28]	<p>제3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동·서·남해 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2.27]	<p>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p>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2.12.11]	<p>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10.10.27]	<p>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영어(營漁)·시설·운전 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차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003.12.31]	<p>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2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5.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7.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9.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p> <p>10.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사업</p> <p>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국가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8.3.28]	<p>제28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0조(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원활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2006.9.27]	<p>제20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광주광역시 및 관할구청은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p> <p>②국가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p>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 과학부 [2005.1.27]	<p>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2007.8.3]	<p>제33조(국비·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00.1.21]	<p>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미래창조과 학부 [2013.8.13.]	제39조(재원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2006.2.21]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06.3.3]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 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안전행정부장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6.3.3]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3.9.29]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 자원부 [2005.3.31]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군·자치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미래창조 과학부 산업통상 자원부 [2008.3.28]	제13조(융자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용자의 대상 및 조건, 용자의 절차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세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산업통상 자원부 [1995.12.29]</p>	<p>제15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안전행정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5) 어촌특화발전 지원(부담금&조세 감면)을 위한 규정 입법사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2012.1.26]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 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 자원부 [2002.12.30]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 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 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 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 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 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 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 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문화체육 관광부 [2004.3.5]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 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 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11]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013.4.5]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4.12.31]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2013.6.4]	<p>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농업생산기 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 품부 [2009.6.9]	<p>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2013.6.4]	<p>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특별법		<p>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5.12.30]	<p>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동·서·남해 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2.27]	<p>제31조의2(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3.12.31]	<p>제30조(부담금의 감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부도공공건 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1.19]	<p>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2.12.11]	<p>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10.10.27]	<p>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우수 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p>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8.3.28]	<p>제26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 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제2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 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5.3.18]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 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2008.3.14]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연구개발특 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 과학부 [2005.1.27]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4.10.22]	<p>제18조(국 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을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p>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p>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p>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00.1.21]	<p>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2011.3.30]	<p>제17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 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06.3.3]	<p>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0.12.29]	<p>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 자원부 [1995.12.29]	<p>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6)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강화 규정 입법사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문화체육 관광부 [2004.3.5]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 과학부 [2011.1.4]	제26조(보고·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 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4.12.31]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2013.6.4]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8.3.28]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3.12.31]	제54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2.12.11]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개발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003.12.31]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p>기오염물질을 채취(採取)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제23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자 3. 제26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1995.1.5]	<p>제30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5.3.18]	<p>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2005.1.27]	<p>제67조(지도와 감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4.10.22]	<p>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p>②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자문·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 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2006.3.3]	<p>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6.3.3]	<p>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3.9.29]	<p>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 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 자원부 [2005.3.31]	<p>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청년고용촉 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2004.3.5]	<p>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2011.3.8]	<p>제26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0.12.29]	<p>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7) 사업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입법사례

구분	소관부처 [제정일자]	지원내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2013.6.4]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004.10.22]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2013年 12月 29日 印刷

2013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김 성 귀

發行處

韓 國 海 洋 水 産 開 發 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印刷/ 크리커뮤니케이션 2273-1775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